

정부 “쌀값 추가 하락 막는다” 작년 민간재고 5만t 매입 추진

농식품부, 6월 당정협의 이행
농협·민간 미곡처리장 등 통보
품종검정 등 거쳐 양곡창고 이송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대로 5만 t(t) 규모의 쌀 재고분 매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15만t’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쌀값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각 지역별 재고에 따른 매입 비중을 산출해, 지난달 28일 각 시도 및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품종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를 실시한다. 매입 절차는 이번 주 시작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69만9000ha)보다 1만ha 이상 추가 감축된 68만3000~68만9000ha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5만t 이상의 추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한다.

지난달 2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15만t의 쌀 민간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의 추가 감축을 통해 쌀 생산을 5만t 이상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2번째)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했다.

당정은 당시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농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한다. 또 5000억 원 상당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은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이 저가에 처분할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만

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예년 가격을 회복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정책위의장은 “쌀의 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수 기자 kys@metroseoul.co.kr

韓-베트남, 녹색사업 협력확대 합의

환경부, 韓-베트남 환경장관 회의
온실가스 감축 등 MOU 4건 체결

환경부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와 ‘제16차 한-베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협력 공동위’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환영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용경험과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2000년부터 장관급 회

의를 정례화하여 환경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시행해 왔다. 이번 제16차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베트남 당 꾸옥 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또 베트남 하티시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양국 간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 급증에 따라, 그간 환경부는 베트남의 환경정책 법제화와 녹색 기반시설 수요에 맞춰 정부뿐 아니라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이

날 베트남 최초의 순환경제형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엔빈 스팀공급 사업에 국내 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체결한 포괄적 환경협력 양해각서(MOU)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계획 합의문 및 주요 환경분야 협력을 구체화한 4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환경협력 수요와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4건의 환경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양국의 환경협력력이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아시아 ‘수문·수자원 관리’ 공동대응 모색

환경부, 세계기상기구 국제회의

아시아 국가들이 물 관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에 나섰다. 1일 경기 고양에서 수자원 분야 각국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막을 올렸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3일까지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조사기

술원에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이 참가한다. 세계기상기구는 전 세계를 6개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지역협의회는 34개 국가로 구성된다.

1일과 2일 예정된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문·수자원 세부 협력 추진방안’과 ‘수자원 평가 역량 향상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여국 관계자와 논의한다.

3일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우리나라의 실시간 자동유량관측, 무인기(드론)·무인선(보트)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문조사 방법을 소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5년간 환경분야 국가자격증 응시자 3.7만명

산인공, 올해 2분기 ‘자격Q’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환경분야 22개 종목의 필기시험 응시 현황과 관련 산업 동향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2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보집에는 ▲대기(4개 종목) ▲생물분류(2개 종목) ▲소음진동(3개 종목) ▲수질(4개 종목) ▲자연환경·생태(3개 종목) ▲토양환경(2개 종목) ▲폐기물처리(3개 종목) ▲환경위해(1개 종목) 분야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 취득 현황 및 응시 현황 등이 담겼다.

환경 분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 인원은 3만 7641명이며, 이 기간 응시인원은 연평균 4.2% 증가했다. 연평균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종목은 대기환경기사(1만 43명)이며, 수질 환경기사(9082명), 환경기능사(67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감률은 생물분류기사(식물)가 34.2%로 가장 많았고, 온실가스 관리기사와 생물분류기사(동물)가 각각 33.8%, 30.4%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환경 분야 22개 종목 필기시험 설문 응답자(3만9962명)에 따르면, 응시 인원의 64.8%는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20대(60.4%), 30대(18.6%), 40대(10.3%) 순으로 많았다. 경제활동 유형으로는 재직자가 40.6%로 가장 많았고 학생(37.0%), 구직자(15.5%) 순이다.

재직자 1만6223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근무처에서 자격을 우대하고 있다는 응답은 71.8%였다. 구체적으로 채용 우대(67.5%), 수당 등 임금 우대(19.4%), 인사고과 우대(8.3%) 순으로 나타났다.

이우영 이사장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격Q’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환경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협회·단체, 대학 입학처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3분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산업부, 상업용·발전용 소폭 인상

정부가 인상이 예상되던 3분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민수용 가스요금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했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난달과 같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을 유지하게 됐다.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은 원료비가 MJ당 17.8294원에서 18.3999원으로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했다.

업무난방용 가스요금은 MJ당 21.1676원에서 21.7381원으로 늘었고, 산업용 가스요금은 하절기 기준 MJ당 18.6305원에서 19.201원으로 인상됐다.

도시가스발전용 가스요금도 원료비가 열병합용 기준 MJ당 17.6042원에서 18.1747원으로 오르면서 약간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부 사이에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얼마나 언제 올리느냐를 두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달 1일자로 민수용 요금을 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이 된다면 오는 9월 1일까지 기다릴지, 혹은 그 전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인상할지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전기요금 전자청구서 신청하세요”

한전, 9월30일까지 이벤트

한국전력은 7월1일~9월30일까지 전기요금 전자청구서(이메일, 모바일)를 신규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 행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기간 종이청구서에서 전자청구서로 전환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20명에게 로봇청소기, 헤어스타일러, 스마트워치,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전자청구서는 한전ON(online.kepco.co.kr) 홈페이지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가까운 지사로 신청할 수 있

으며, 신청 고객은 별도 절차 없이 행사에 자동 응모된다.

한전은 2009년 1월부터 전기요금 전자청구·납부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모바일과 이메일로 상세 전기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신속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카카오페이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더존비즈온의 모바일청구서를 신청하면 전국 편의점에서 QR코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